

현실 구성의 정치학

하상복*

【요약】

1991년 4월 26일에 벌어진 강경대의 폭행치사 사건은 노태우 정부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정부는 5공 청문회에 이어 또 하나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권력의 폭력성을 비난하는 반정부세력의 시위와 반정부 여론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정부의 위기 해결의 메커니즘은 5월과 6월에 연이어 발생한 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이미지 구성과정으로 만들어졌다. 학생들의 연쇄분신과 외국어대 총학생회의 국무총리 폭행은 정부 및 언론을 포함한 친정부 행위자들이 반정부 세력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조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축소된 것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그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연쇄분신, 총리폭행, 주관적 현실, 이미지, 언어적 재구성.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I. 들어가는 말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생 강경대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청문회에 이어 또 하나의 정치적 난관에 직면했다. 전두환 정부가 겪어야 했던 정치위기의 직접적 동인이 경찰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박종철과 이한열의 사망을 이슈화한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강경대 사건 또한 그러한 정치적 잠재력을 충분히 지닌 스캔들로 생각할 만했다. 그러한 추론은 빗나가지 않았다. 학생과 시민들은 ‘분신’(焚身)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공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정부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책 인사와 개각이라는 관례적 대응책으로 일관하면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제도권 바깥의 반정부 운동세력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거리에서 정부를 향한 물리적 공격의 강도를 높여 갔다. 노태우 정부의 수세적 국면은 5월 초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정세는 오래지 않아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열세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6월 들어서는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러한 역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다음의 둘을 들 수 있다. 첫째, 1991년 6월 6일 전국 87개 시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반정부 시위가 참여 인원 부족으로 17개 시에서만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1991년 6월 20일에 열린 광역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전국적으로 83.3%(866석 중 564석 획득)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지방의회를 장악했다는 점이다.¹⁾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노태우 정권은 초기의 수세적 국면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강정인은

1) 『한국일보』 1991년 6월 6일; 『한겨레』 1991년 6월 22일.

한 논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주목할 만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연쇄분신과 이어 발생한 외국어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이하 국무총리 혹은 총리로 표기함) 폭행을 정부 및 친정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정치적 이용은 정부와 친정부 세력이 그 두 사건을 반정부세력의 비도덕적·반윤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상징적 동원을 시도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구축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얻으면서 궁극적으로 반정부세력의 내부분열과 여론의 적대적 감정을 유도했다는 해석이다.²⁾ 주지하는 것처럼, 분신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김지하가 분신을 비난하는 도덕적 언사를 언론에 발표하고, 박홍 서강대 총장이 그 사건 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발언했다. 곧 이어 정원식 국무총리가 외국어대에서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은 이를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학생과 반정부단체의 폭력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학생운동세력을 비롯한 반정부집단의 도덕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때 강정인은 정부의 위기 탈출에 관한 매우 적절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논의를 충분히 이끌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 및 친정부 행위자들이 분신과 총리폭행사건을 이용해 반정부세력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이미지가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졌는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강정인은 반정부세력에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이라는 사실에는 주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언어 상징들이 동원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이 논문은 위에서 설명한 정치적 스캔들을 매개로 반정부세력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언어적 행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2) 강정인, 「정치와 죽음: 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발표논문 (2001.05.23), 17.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주요한 분석의 초점을 ‘언론’에 두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보도양식이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와 그에 따른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³⁾을 강조하고자 한다.

언론은 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치적 스캔들과 그에 관련된 정치집단들의 의미를 건설(construction of sens)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⁴⁾ 그 과정은 곧, 언어에 의한 주관적 현실의 구성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버거(P. Berger)와 루크만(T. Luckman)의 논의에 입각해 주관적 현실을, 인간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화된 현실을 의미하는 객관적 현실에 대비되어, 이른바 사회화와 내면화를 통해 인간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고 지각되는 현실로 정의하고자 한다.⁵⁾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의미와 상징으로 구축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언어를 제외하고 주관적 현실의 구성을 상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

II. 지식인과 분신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시작:

“분신 = 반인륜적 악행”

강경대의 사망 직후부터 반정부세력은 제도권(국회)과 비제도권(거리)에서 정부의 폭력성을 비난하는 정치운동을 광범위하게 제기해 나가기 시작했다.

3) M. Edelman, *Politics as Symbolic Action*(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71), 127.

4) P. Braud, *Emotion en Politique*(Paris: Presses de Sciences Po, 1996), 88.

5) 버거·루크만, 박충선 역, 『지식형성의 사회학』(서울: 기린원, 1991), 75-81, 179-228.

6) David A. Rochefort, and Roger W. Cobb,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Shaping the Policy Agenda*(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4), 9.

그들은 강경대의 사망 사건을 “노 정권이 노재봉 내각 출범과 함께 공안 통치로 선화한 후 탄압정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신한민주당),⁷⁾ “시위과정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적·계획적 살인”(전대협),⁸⁾ “경찰이 학생을 살해한 사건은 6공화국의 폭력적 본질을 드러낸 것”(한국기독교 장로회)⁹⁾ 등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권력의 비도덕성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확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반정부 동원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초기 대응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었다. 정부는 가담 전경의 구속 및 서장의 직위 해제, 진상공개 공약,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의 경질,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발언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고식적이고 비본질적인 대응책에 불과했다. 특히, 당시 노재봉 총리는 “학생시위를 막던 전경들이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같은 연배의 시위대학생을 구타·사망케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내각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과의 변을 발표하면서도 “이 같은 사건이 격렬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직시할 때 지성인인 대학생들의 과격시위도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¹⁰⁾라는 발언을 통해 정부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의 책임을 학생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사태 악화에 따른 수세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정부세력들은 5월 4일까지로 계획된 강경대 추모기간을 포함, 5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5월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한 교착 국면에서 학생들의 연쇄분신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7) 『동아일보』 1991년 4월 27일.

8) 『한국일보』 1991년 4월 28일.

9) 『국민일보』 1991년 5월 2일.

10) 『한국일보』 1991년 4월 30일.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5월 8일 전민련 김기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신사태는 정부의 정치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연쇄분신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과 당혹감이 파급되는 상황 속에서 노태우 정부로서는 실질적인 위기타개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심은 자신의 폭력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안감과 당혹감을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안책의 제시에 있었다. 그러한 전략의 최초 계기는 5월 5일 김지하 시인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마련되기 시작했다. 김지하는 1991년 5월 5일자 『조선일보』 3면에 “짧은 벚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반정부세력, 특히 분신을 이어나간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기고문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짧은 벚들! 나는 너스케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곱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신들은 잘못 들어서고 있다. 그것도 크게! …… 당신들은 민중에게서 무엇을 배우자고 외쳤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 삶의 지혜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가?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리고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당신들을 흔히 ‘지도’라는 말을 쓴다. 또 ‘선동’이라는 말도 즐겨 쓴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환상적 전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선동하려 하는가? 더욱이 죽음을 찬양하고 요구하는가? 제정신인가, 아닌가? …… 철부지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당신들은 지금 극히 위태롭다. 생명은 자기 목숨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인데 허물며 남의 죽음을 제멋대로 부풀려 좌지우지 정치적 목표 아래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모양인데 그렇다. 바로 그 대답에 당신들의 병의 뿌리가 있고 문제의 초점이 있다. 지금 당신들 주변에는 검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을 분명히 말한다. ‘네크로폴리아’ 시체선호증이다. 싸늘이 충동, 자살특공대, 테러리즘과 파시즘의 시작이다. …… 자살은 전염한다.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사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 생명말살에 환각적 명성을 들썩워 주고 있다. 컴컴하고 기괴한 심리적 원형이 안무한다. …… 짧은 벚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끼치는 의사긋을 당장 걷어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 곧 생명을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행동을 선택하라.

최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일간지에 한국의 대표적인 저항적 지식인들 중의 한 사람이 실은 글이라는 점에서 결코 자연스런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정치적 예외성으로 인해 기고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고문은 학생들의 분신을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극단적 저항의 방식으로서 순수한 애국적 열정, 희생자에 대한 동지에 또는 최고의 자기희생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그와는 정반대로 묘사되고 있다. 분신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세력들은 인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공히 극단적 비윤리성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고 선동하고, 자살을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포장하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죽음은 그렇게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일반화된 경험과 정보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공권력에 의한 죽음을 마주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신, 그것도 일정한 시간적 간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쇄분신은 거의 발생한 적이 없었다. 과거의 경험과 그에 따른 집단화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시급한 일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사태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인식틀(cognitive framework)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지하의 기고문은 연쇄분신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연쇄분신은 순수한 자기희생이자 가장 숭고한 정치적 자기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가치인 생명을 부정하고 죽음의 사회적 확산을 노리는 악마적

존재들의 정치적 음모라는 김지하의 해석 프레임은 5월 8일 서강대 박홍 총장의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한층 더 강력한 설득효과를 얻게 된다. 5월 8일 오전, 김기철의 자살이 가져온 충격 속에서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은 학생들의 연쇄분신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배후에 분명히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 “이들은 그늘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마시듯 폭력을 전염시키고 있다”, “이 죽음을 ‘조출하게’ 슬퍼하고 뒤에서 죽음을 조종하는 어두운 선동세력의 실체를 폭로해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선포식을 가집시다.”¹¹⁾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음흉한 세력의 유혹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선동세력의 정체를 진실 앞에 폭로하고 단호히 쓸어버리자”, “어버이날에 인륜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포한 김씨를 충동질한 어두운 세력의 뿌리를 산자들이 뽑아버려야 한다.”¹²⁾

근본적인 면에서 김지하의 논리와 같은 해석을 지향하고 있지만, 박홍 총장의 발언은, 학생과 청년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의 분신행위를 도덕적·인륜적 차원에서 비난하는 김지하와는 달리 분신을 반정부 세력 전체에 연관된 문제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즉, 연쇄분신은 학생·청년세력들의 정치적인 오판과 비윤리성 때문에 발생한 사태를 넘어 “배후”, “유혹”, “충동질”, “죽음 선동세력”, “조종”, “음흉한 세력”, “어두운 세력”과 같은 낱말이 제시하듯이, 분신을 막후에서 계획하고 강요하는,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력의 정치적 음모로 그려지고 있다. 이제 분신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악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게 된다. 김기철의 분신과 관련해 누군가가 그의 분신을 조종했다는 목격담이 여러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이라는 맥락이 그러한 이미지 조성의 가능성을 유도했을 것으로

11) 『세계일보』 1991년 5월 9일.

12) 『국민일보』 1991년 5월 9일.

보인다. 김지하와 박홍의 발언에 의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에 기인하는 사회적 악으로 정의되면서 이제 연쇄분신은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그러한 악을 확산시키는 주체들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한 사회적 임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진압경찰의 폭력에 의한 강경대의 사망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학생들의 분신은 공권력의 폭력 문제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지하와 박홍의 정치언어는 그러한 정의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버렸다. 초점은 정부의 지나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의 비도덕적이고 사악한 행동양식에 초점이 놓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인식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적 파생효과를 만들어냈다. 먼저, 그동안 수세적 국면에 놓여 있던 정부가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다. 검찰은 김기설의 분신을 계기로 반정부 조직들에 대해 공권력을 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연쇄분신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개입이었다. 정부는 상징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이데올로기장’(ideological field)이 물리적 힘의 행사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에서 산출될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될 순간까지 성숙하도록 인내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두 지식인의 정치적 개입은 주요 언론들로 하여금 연쇄분신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사회 여론이 다른 무엇보다 분신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분신에 대한 언론의 경쟁적 보도와 해석은 김지하와 박홍의 정치언어가 지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정보기능을 수행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사람의 기고와 회전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반하지 못한 일종의 선언적 발언들이었다. 그 속에는 학생 혹은 반정부세력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감성적 수사들로 넘쳐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증거나 증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언이 아니라 마치 과학적 수사를 행하듯이 분신의 기사화를 시도한 언론에서는 과학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가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었다.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Ⅲ. 언론의 개입: ‘분신 = 배후세력의 정치적 음모’

지금까지 연쇄분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행위자들이, 김지하와 박홍의 발언으로 분신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해석이 여론의 관심을 얻게 되자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검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먼저 정구영 검찰총장은 박홍 총장의 논리를 언어적으로 재현했다. 그는 분신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에 따른 것인지”¹³⁾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한다. 검찰은 분신이 특정한 세력의 조종에 의한 계획적 사건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모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환기했다. 첫째, 모두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났고, 2-4일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는 점, 둘째, 지역적으로 호남, 영남, 경기, 서울 등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점, 셋째, 김영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서를 남겼다는 점, 넷째, 분신한 학생 3명 모두 대학교지 편집위원으로 반정부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그러한 점에서 분신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좌익세력 등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사건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¹⁴⁾ 이러한 논리를 앞세운 검찰의 개입은 분신에 관한 주목할 만한 사회적 인지 효과를 갖는다. 학생·청년세력 또는 반정부세력 전체의 반인륜적 태도와 음모론적 전략을 비난한 김지하와 박홍의 발언이 검찰의 정황수사발표를 통해 대중적 설득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김지하와 박홍의 주장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식이 파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효과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바로 언론의 보도였다.

박홍의 발언과 검찰의 수사 착수 선언이 있는 뒤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간신문들은 ‘계획적 분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보도로 나아갔

13) 『서울신문』 1991년 5월 9일.

14) 『조선일보』 1991년 5월 9일.

다. 먼저, 연쇄분신의 비도덕성 여론 조성에 최초의 역할을 수행한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5월 9일자 조선일보 22면과 23면(사회면)에는 “죽음 선동하는 세력 있다”, “분신현장 2-3명 있었다”, “2-3일 간격 연쇄발생 ‘계획’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린다. 첫째 기사의 경우, 박홍 총장의 회견문 중 분신의 반윤리적 측면과 음모론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으며, 둘째와 셋째 기사의 경우, 김기철씨 분신 목격담과 검찰의 논리 및 분신에 관한 김기철씨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인용해보기로 하자. “김씨의 분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서강대의 모 교수로, 그는 8일 오전 8시 10분쯤 출근길에 교문을 들어서면서 서강대 본관 건물 5층 옥상에서 김씨가 몸에 불이 붙은 채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강신욱 부장검사는 이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가 떨어진 직후 본관 옥상에 흰 점퍼차림을 한 청년 등 2-3명이 더 있었고, 이들이 김씨의 투신 후 곧바로 5층 옥상에서 부리나케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말했다.”(분신 목격담), “강군의 사망 등 시국상황에 격분한 일부 운동권의 단발적인 분신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분신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모종의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의 주장), “분신한 김씨는 분신하기 4-5일전부터 주변의 동료들에게 ‘분신하겠다’고 말해왔으며 8일 새벽 5시 30분까지 분신을 만류하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 빠져나와 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기철의 생각). 이어서 5월 10일자에는 “박홍총장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실이 실렸다. 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박홍 총장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기초로 운동권 세력을 윤리적·정치적 차원에서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박 총장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살 소동에는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문점이 개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낀다. 또 항상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고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을 박 총장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파탄적, 비지성적 소란을 보며 책임 있고 교육자다운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분신은 사상과 행동의 혼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거짓 이념과 영웅 환상을 고취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죽음 찬미의 자살증후군이다.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 바로 그 같은 인간가치 파괴의 행태는 국민의 동정과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이 사실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첫째 박홍 총장의 발언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경력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점, 둘째, “자살 소동”, “비지성적 소란”, “자살 증후군” 등의 표현을 통해 분신을 폄훼함과 동시에 외부 세력에 의해 계획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분신의 본질에 대한 정치적 왜곡이 우회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말해주는 측면이다.

이러한 논조의 보도형태는 『서울신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5월 9일자 1면에는 “분신 선동세력 철저히 색출: 3부장관·대학총장 간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윤형섭 교육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인용된다.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근저에는 이를 특정 목적에 이용하려는 외부세력의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외형적인 시위만을 막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분신과 외부세력의 조직적 연계는 검증을 기다려야 하는 가설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또한, 5월 10일의 사실(“분신을 부추기는 세력”)을 보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김지하와 박홍의 정치적 경력을 들면서 이들의 발언이 결코 거짓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배후세력’이 있다는 확증 아래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런 방침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의 국면이 염려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변사’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살, 특히 분사 같은 돌연하고 치열한 죽음은 확실한 ‘변사’이므로 원인과 결과까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검을 운동권에게 탈취당하고 영안실을 봉쇄당해 온 운동권의 죽음은 수사가 제대로 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배후세력’이 있었다 라도 그것을 밝힐 정황이 못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이를테면 공권력의 직무유기 같은 것이었다. 검찰의 의지가 그럴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후세력의 존재에 대한 강조는 분신을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낙인찍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분신이 정치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신문들 역시 분신과 외부세력의 조직적 연계성에 주목하는 해설 기사와 사설을 통해 그에 관한 여론화 작업을 시도한다. “분신자살조 사실일까”¹⁵⁾,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박 총장이 밝힌 ‘분신배후’의 충격”¹⁶⁾, “죽음의 그림자, 실체 밝혀야”¹⁷⁾ 등의 사설에서 분신은 “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의문스런 사태”(한국일보), “운동권 내에 분신조와 투신조가 조직되어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떠올리게 하는 사태”(경향신문), “현장 정황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조직적일지 모른다는 의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태”(세계일보) 등으로 묘사된다. 나아가 언론들은 “분신 배후 있나 없나”¹⁸⁾, “운동권 돌파구 노린 ‘충격카드’: ‘분신자살’ 왜 꼬리무나”¹⁹⁾, “분신 배후 밝혀낼까”²⁰⁾, “분신 선동세력 있나 없나: 4번째 희생 현장 주변”, “분신배후 수사: 옥상에 2-3명 있었다”²¹⁾, “옥상 자물쇠 누가 열었나: 검찰 분신배후 수사”²²⁾ 등의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분신에 관한 의문점들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초래된 일로 분신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5) 『한국일보』 1991년 5월 10일.

16) 『경향신문』 1991년 5월 10일.

17) 『세계일보』 1991년 5월 10일.

18) 『국민일보』 1991년 5월 10일.

19) 『세계일보』 1991년 5월 9일.

20) 『세계일보』 1991년 5월 10일.

21) 『경향신문』 1991년 5월 9일.

22) 『경향신문』 1991년 5월 10일.

정치세계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²³⁾, 분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주요 신문들은 틀짓기 효과(framing)—특정 사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인지들의 제공—와 더불어 점화 효과(priming)—뒤에 나타나는 이슈의 부각에 의해 앞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현상—를 산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말하자면 언론은 배후세력의 정치적 음모로 요약되는, 분신을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해석의 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도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여론의 지배적 관심이 공권력에 의한 대학생의 사망이라는 이슈에서 연쇄분신에 연관된 사회적 비정상성에 대한 문제로 이동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분신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속에서 정부는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반대세력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인격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분신행위를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반정부세력의 사회적 이미지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6월 외국어대에서 발생한 국무총리 폭행사건이었다.

IV. 언론과 총리폭행의 언어적 재구성:

“폭행 = 패륜·체제전복 행위”

1991년 6월 3일, 외국어대 학생들이 정원식 국무총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이 강의를 위해 대학에 들어선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퍼부은 뒤에 그를 교정 여기저기로 끌고 다닌 일이었다. 학생들의

23) 데니스 맥퀘일, 양승찬·강미은·도준호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서울: 나남, 2000), 제6부 참조.

24) 데니스 맥퀘일,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550-554.

폭력적 행위는 국무총리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불만에 그 원인이 있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1989년에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임한 인물이었다. 학생들과, 전교조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총리 폭행사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정 총리의 봉변사태는 정 총리 개인에 대한 인간적 분노의 표시라기보다는 노재봉 총리 사퇴이후 더 지탄받는 인물을 총리로 등용한 현 정권에 대한 학생과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대책회의 논평), “이번 사건의 원인은 현 정권이 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하면서 1천5백여 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축출한 것을 비롯, 세종대, 동의대 등 학원사태 악화의 장본인을 총리로 임명한데서 비롯됐다”(전교조 논평).²⁵⁾ 이들의 담론은 본질적으로 정원식 총리를 개념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폭행당한 인물은 ‘교수’ 정원식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한 ‘정치인’ 혹은 ‘공직자’ 정원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분류는 곧, 보수언론들이 총리폭행을 사제 간의 윤리적 문제로 해석할 것을 우려하면서 만들어낸 선제적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분류방식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한 정치적 한계는 당시 언론 공간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쇄분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건을 비윤리적이고 음모적인 행위로 의미화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여전히 학생세력들의 도덕적 순수함과 이념적 숭고성을 지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6월의 총리폭행과 관련해서는 『한겨레』조차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해버렸다. 말하자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언론의 공간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태에 신속히 개입한 언론은 예외 없이 학생들의 폭력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이로써 학생들이 제기하고자 했던 개념적 분류의 틀은 전혀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5) 『조선일보』 1991년 6월 5일.

폭행사건을 둘러싼 해석의 정치학에서 주도권을 잡은 행위자는 언론이었다.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1면으로부터 사설에 이르기까지 총리폭행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해석의 주된 방향은 폭력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6월 4일자 『한국일보』를 관찰해보기로 하자. 신문은 1면의 오른쪽 지면에 총리폭행사건을 실었다. 신문의 지면구성과 관련해 1면을 차지하는 기사의 뉴스가치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세로쓰기 편집에서는 지면의 오른쪽이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사가 실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이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1면 보도의 헤드라인들을 뽑아보자. “총리폭행 강력조치”, “계획된 테러 …… 전원구속” “정부 긴급대책회의, 학원폭력 근절책 강구” 등이다. 압축적인 언어들 선택적 배열을 통해 사건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헤드라인의 기능²⁶⁾에 입각해 위의 표제를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테러”라는 낱말이 눈에 띈다. “폭행”, “폭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지만 테러는 앞의 두 단어보다 한층 더 강력한 정서적 추동력을 갖는 상징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테러는 부정의와 공포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에 맞서 싸울 집단적 의지를 북돋우는 동원의 언어다.²⁷⁾ 그러한 표제 아래에서 1면 기사는 제란과 밀가루로 뒤덮인 정 총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폭행’과 ‘테러’의 용어들이 구체적인 시각적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사진의 효과는 2면과 3면의 기사를 통해서 한층 더 강력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마지막 수업…기막힌 순간…절망의 현장”이라는 표제로 2면에 실린 사진은 5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사건의 시간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는 정원식 국무총리가 강의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외국어대로 향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국무총리를 향해 학생들이

26) 손석춘, 『신문읽기의 혁명』(서울: 개마고원, 2006), 62-78.

27) I. Garcin-Marrou, *Terrorisme, Médias et Démocratie*(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2001), 116.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퍼붓는 장면, 국무총리를 교정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는 장면,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로 택시를 타는 국무총리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뒤따르고 있다. 마치 잘 짜인 하나의 비극적 소설을 읽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시각적 서사(narrative)는 1면의 사진과 비교할 때 폭행과 테러에 대한 한층 더 강렬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듯 신문은 1면과 2면의 헤드라인과 사진 그리고 보도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 의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테러가 저질러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3면에 실린 사진은 폭력과 테러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사진에는 정원식 국무총리와 외국어대 총장이 등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외국어대 총장의 모습인데,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양손을 모아 국무총리에게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부모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 역시 “사과하는 외대 총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폭행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점이 ‘중충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언론은 테러 수준의 폭력이라는 해석적 관점에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간에 지켜야 할 인륜의 관점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 이러한 보도양식은 다른 일간지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재현되었다. 6월 5일자 『경향신문』의 사설(“더 이상 폭력 묵과 못해”/“총리폭행에 격앙된 여론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주동이 되어 정원식 총리서리에게 가한 폭력은 이미 학생이길 포기한 폭거요, 또 인간임을 거부한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광란적 사태에 ‘동방예의지국’이니 ‘군사부일체’니 ‘교권의 존엄’이니 하는 단어는 차라리 한가로운 사치에 불과하다.

폭행사건에 대한 『한국일보』의 두 관점, 극단적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라는 관점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6월 4일자 『국민일보』의 사설(“학생인가 폭력 난동꾼인가”)은 “아무리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라 해도 아버지, 할아버지 연배의 총리를 개 끌듯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밀가루, 계란세례를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주먹질 발길질을 서슴지 않은 작태”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력성과 반인륜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세력을 비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태에 대한 언론의 공격적 비난은 그러한 두 관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폭력성과 반인륜성이 친북, 좌경, 용공, 즉 절멸시켜야 하는 사회적 악 혹은 적으로 반정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데 동원되는 이념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한층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적대감과 공포의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해석 전환의 움직임을 『경향신문』(앞의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운동권을 타락하고 있다”)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제 극소수의 일부 과격운동권학생들에 의해 교권이 짓밟히고 전체 대학생들이 매도되는 상황은 끝장을 내야 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특정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폭력으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학이 언제까지 폭력, 체제전복세력의 성역이어야 하는가(경향신문).

이들 조직은 이제 윤리적 투쟁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민중혁명 세력이며 주사파 집단이라고 세간에선 보고 있다. 이들 세력은 그 동원과정에서 치밀하게 조직적이며 자금 면에서도 수 만 개의 도시락을 동시에 조달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이와 같이 두 사설에서 폭행사건의 주체들은 친북 주사파집단, 체제전복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어대 총학생회만이 친북, 좌경, 용공 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를 부정하는 거대한 민중운동세력의 일부로 편입되어 6월 3일 외국어대에서 벌어진 스캔들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비난은 반정부세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정치적 ‘외삽화’(generalization)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신문이 폭력, 반인륜, 체제전복의 논리로 학생운동세력, 나아가 반정부세력 일반을 비난하는 정치적 담론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신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쇄분신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해주던 『한겨레』조차, 온건한 방식이긴 해도, 폭행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6월 5일자 사설(“총리 폭행은 민주화에 걸림돌”)은 “외대 총학생회는 민주화를 향한 온 국민의 대열 앞에 걸림돌을 놓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⁸⁾

한 연구자는 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조합은 준거틀을 확립해준다. 그 밖에서는 어떠한 논쟁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미디어의 사회적 행위는 승인되는 정의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있다.”²⁹⁾ 이러한 명제는 아마도 국무총리 폭행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일간신문들이 동일한 논리와 해석적 틀 아래에서 구성한, 사태에 대한 의미체계가 사회여론 형성의 외적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지었다. 즉, 폭행사태에 관한 여론의 방향은 언론이 조형한 인지를 혹은 해석틀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사건을 특정한 정치적 의미의 틀로 만들고 있던 언론장의 움직임에 조응해, 법률과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학생운동권 세력의 조사와 검거와 같은 공권력의 정치적 행위가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반정부 시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양면적 현상이 그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6월 6일 외국어대와 경희대에 진입한 경찰은 85명의 운동권 학생들을 체포했으며, 다음 날 정부는 반정부운동세력의 상징적 존재인 문익환 목사를 구속하는 것을 필두로, 반정부 인사 88명을 체포했다.³⁰⁾ 그와 동시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전국 63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대학생들의 학내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논의했다.³¹⁾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과는

28) 물론, 『한겨레』는 학생들만을 비난하지 않았다. 외국어대 교수들과 정부당국 또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 P. Beaud, *La Société de Connivence*(Paris: Aubier-Montaigne, 1984), 292.

30) 『동아일보』 1991년 6월 7일.

대조적으로 전국 87개 시에서 열리기로 계획된 반정부 시위는 참가 인원의 부족으로 겨우 17개 시에서만 개최되었고, 이어진 6월 20일의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V. 나오는 글

1991년 4월 26일에 벌어진 강경대의 폭행치사 사건은 노태우 정부의 위기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단 두 달 만에 정치적 수세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위기 돌파의 근본적 이유를 연쇄분신과 국무총리폭행에 대한 정부와 친정부 행위자들의 언어적 혹은 상징적 개입에서 찾고자 했다. 그 메커니즘의 본질은 두 사건을 통해 반정부세력의 정치적 이미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조형하는 데 있었다. 두 사건을 둘러싸고 작동한 정치언어는 반정부세력들을 폭력, 패륜, 체제전복, 음모와 같은 극단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냈다. 그러한 이미지는 정부가 학생운동세력을 포함해 반정부세력들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데 결정적인 심리적·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1991년 4월과 6월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논의지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치권력의 이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권력은 법률과 물리적 토대가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실체³²⁾로 이해되고 있지만, 우리는 권력의 언어적 차원 혹은 상징적 차원의 존재³³⁾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력과 상징권력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동하는데, 제도권력 행사의 사후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장치로 상징권력이 이용되거나, 혹은 역으로 상징권력의 행사를 통해 제도권력 작동의 정당성이 확보되곤 한다. 여기서 살펴본 사례는 그러한 두 권력의 상호작용

31) 『한국일보』 1991년 6월 6일.

32) P. Guillot, *Introduction à la Sociologie Politique*(Paris, Armand Colin, 1998), 161.

33) G. Balandier, *Le Pouvoir sur Scènes*(Paris, Editions Balland, 1992), 33; P. Bourdieu, *Propos sur le Champ Politique*(Lyon; Pul. 2000), 64-65.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지하는 것처럼, 언론은 단순히 정치사회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언론은 하나의 사실을 특정한 의미와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재구성을 구축해내는 정치적 주체다.³⁴⁾ 셋째, 언어의 정치적 차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정치적 공간에서 언어는, 오스틴(John L. Austin)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정치적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장치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국면에서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창출해낸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에델만(M. Edelman)의 입론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실행되는 상황과 이에 관련된 청중들의 필요, 이해관계 및 청중들의 언어 수용 양식의 함수다.”³⁵⁾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1991년 4월 후반부터 6월 후반까지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과 갈등의 과정을 한국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5월 투쟁’³⁶⁾으로 명명한다.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5월 투쟁을 한국 민주화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문제의식 아래에서 5월 투쟁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왜 상대적으로 미약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답을 5월 투쟁이 실패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도리어 5월 투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밀려 도덕성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약화시켰으며, 역설적이게도 노태우 정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투쟁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조차 ‘잊혀진’ 아니 ‘잊고 싶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³⁷⁾

34) P. Champagne, *Faire l'Opinion*(Paris: Editions de Minuit, 1990), 187.

35) M. Edelman,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131.

36) 전재호·김원·김정환,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37) 전재호, “한국 민주주의와 91년 5월 투쟁의 의미”, 전재호·김원·김정환,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16.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5월 투쟁의 실패는 몇 가지 요인들로 정리되는데 첫째, 운동 지도부의 실패, 둘째,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셋째 중산층의 이반, 넷째, 비조직적 시민사회와 전선의 분열, 다섯째, 정치사회와의 연대 실패 등이다.³⁸⁾ 이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 분석 맥락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투쟁의 실패에 대한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시각과 관련해 적어도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중산층의 이반”라는 두 요인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8) 전재호, “한국 민주주의와 91년 5월 투쟁의 의미”, 24.

참고문헌

- 강정인(2001), 「정치와 죽음: 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발표논문(05.23).
- 맥퀘일, 데니스(2000), 양승찬·강미은·도준호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 버거, P.·T. 루크만(1991), 박충선 역, 『지식형성의 사회학』, 서울: 기린원.
- 손석춘(2006), 『신문읽기의 혁명』, 서울: 개마고원.
- 전재호·김원·김정환(2004),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Balandier, G.(1992), *Le Pouvoir sur Scènes*, Paris, Editions Balland.
- Beaud, P.(1984), *La Société de Connivence*, Paris: Aubier-Montaigne.
- Bourdieu, P.(2000), *Propos sur le Champ Politique*, Lyon; Pul.
- Braud, P.(1996), *Emotion en Politique*,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Champagne, P.(1990), *Faire l'Opinion*, Paris: Editions de Minuit.
- Edelman, M.(1971), *Politics as Symbolic Action*,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5),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arcin-Marrou, I.(2001), *Terrorisme, Médias et Démocratie*, 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 Guillot, P.(1998), *Introduction à la Sociologie Politique*, Paris, Armand Colin.
- Rochefort, David A. and Roger W. Cobb(1994),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Shaping the Policy Agenda*,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경향신문』 1991년 5월 9일, 10일.
- 『국민일보』 1991년 5월 2일, 9일.
- 『동아일보』 1991년 4월 27일, 30일, 6월 7일.
- 『서울신문』 1991년 5월 9일.
- 『세계일보』 1991년 5월 9일, 10일.
- 『조선일보』 1991년 5월 9일, 6월 5일.
- 『한겨레신문』 1991년 6월 22일.
- 『한국일보』 1991년 4월 28일, 5월 10일, 6월 6일.

【Abstract】

The death of Kang Kyong-dae, a student of Myung-ji University, by police's assault, occurred on April 26, 1991, has led to the crisis of Roh's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meet another political crisis, after one brought about by the hearing to 5e Republic. It had to breakthrough this crisis by the effective management of anti-governmental manifestations and opinions. The solution has been found in process of political interpretation and image-making about the two successive affairs, occurred in Mai and June. They were a serial self-burning of several students and youths and a students' violence of prime minister. They have made a crucial social climate in which the government and pro-governmental actors including the media could construct a negative image of anti-governmental actors, that has consequently made possible that government has passed the second crisis. Two facts can verify indirectly it, one, a large-scale reduction of anti-governmental manifestations planned to be held in numerous cities, the other, the overwhelming victory of governmental party in municipal election.

【Keywords】 serial self-burning, violence of prime minister, subjective reality, image, linguistic reconstruction.

논문 투고일: 2011. 02. 07

심사 완료일: 2011. 04. 07

게재 확정일: 2011. 04. 13